

# 농특산물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

의안 번호	154
----------	-----

제안년월일 : '96. 10. 16.

제안자 : 농림수산위원장

## 1. 주 문

- '96년산 추곡수매는 농업인의 영농의식 고취를 위하여 수매가를 전년대비 13% 이상 인상되도록 우선 조치하여 줄 것
- '96년산 앞담배 수매가도 전년대비 15% 이상 인상하여 주시고,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계획을 적정한 시기까지 연장하여 줄 것
- 무, 배추, 고추등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가격파동이 심화되고 있는 채소류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정부 및 농협에서 시가로 수매하여 수급 조절하여 줄 것

## 2. 제안 이유

- 금년은 벼농사를 비롯한 채소류의 농작물이 대풍작이 예상되고 있으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이 심화되고 있음.
- 수년째 동결되어온 추곡수매가, 앞담배 수매가로 경작 농업인은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영농을 포기하여야 할 실정에 있음.
- 농업인들이 이러한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생력을 가지고 영농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3. 참고 사항

없 음

# 농특산물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

존경하는           국 회 의 장  
                      재정경제원장관    께  
                      농 립 부 장 관

21세기의 복지국가 실현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盡力) 하시고,  
특히,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농촌의 소득증대에 깊은 관심을 갖고 노심초사 하시는

국 회 의 장  
재정경제원장관    님께 온 도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 립 부 장 관

금년은 벼농사를 비롯한 채소류 등의 농작물이 농업인들의 정성과 알맞은 기후로  
들녘 마다 사상 유래없는 대풍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가을추수 건이의 기쁨보다는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의 폭락과  
출하의 걱정, 그리고 소득 감소로 인한 농민들의 수심 또한 깊은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농촌은 정부의 산업 우위 정책으로 인한 농업축소 정책과 세계무역  
기구(WTO) 출범으로 인한 외국 농산물의 수입으로 경쟁력마저 잃어가고 있으며,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농촌노동력의 부족과 인건비 상승, 생산자재비와 농기계 사용료마저 크게 올라 농업인들은 경작의욕을 상실하여 농사를 포기하여야 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4년째 동결되어온 추곡수매, 잎담배 등 정부의 농산물 수매가는 현실화 되지 않고, 무·배추와 고추는 식부면적의 증가와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적정 수요량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가격이 계속 폭락하고 있어,

생산 농업인들은 영농자금 및 부채 상환의 어려움과 함께 영농의 위기 의식으로 커다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시어 우리 농업인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96년산 추곡수매는 농업인의 영농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수매량의 증가보다 수매가를 전년대비 13% 이상 인상되도록 우선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96년산 잎담배 수매가도 전년대비 15%이상 인상하여 주시되, 정부물가 정책에 어려움이 있다면 수매가를 9% 인상하고, 담배사업법에 근거한 생산장려금으로 6%이상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추진 계획도 적정한 시기까지 연장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산물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무·배추와 고추 등 채소류의 가격 파동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과잉생산분에 대하여는 생산자 단체인 농협과 정부에서 최소한 생산비 수준이상의 시가로 조속한 시일내에 수매하여 물량의 수급과 가격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 회 의 장  
                      재정경제원장관    님  
                      농 립 부 장 관

농특산물 출하가격이 안정되어,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농가의 소득도 향상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온 도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1996. 10. 17.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